

국내외 기술창업 동향 및 기술창업 촉진 정책

김대호 (목원대학교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 흥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I. 국내외 기술창업 동향

1.1 제도 취지 및 국가전체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

○ 창업문화의 확산을 통한 창업활동의 육성, 새로운 기업양산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 선도적 시장진입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등 국가경쟁력 제고

○ 국가정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을 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1.2 부처 관련정책

○ 타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관련 정책은 전무하고,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하여 추진하는 정도임

* 정보통신부(창업경진대회, 8억원), 과학기술부(창업기업 컨설팅 및 창업대상 선정, 4.2억원), 농림부(창업경진대회, 0.3억원)

1.3 지금까지 현장에서 특히 성과를 거둔 사례 또는 실패사례

○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 투자금액의 10% 보조, 농지전용부담금 등 12종의 부담금을 3년간 일괄 면제

- 취·등록세 감면기간 확대(2년→4년),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 요건 완화(2년→3년)

○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마인드 고취, 기업가 정신 함양 및 기술창업 인식제고 등 창업저변을 확충.

- 초중고생(152,022명), 대학(원)생등 (23,187명), 창업동아리(960개, 16,333명)

- 대학·연구소 중심의 보육센터를 활용한 기술창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성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전국 269개 BI 운영/ 일반기업(32%)보다 높은 창업성공율(70%) 시현
- 보육센터 입주기업 4,330개, 매출 2조원, 고용 23천명 신규창출

II. 국외 기술창업 촉진정책

2.1 미국

- 미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창업지원정책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자, 대학 등으로 하여금 창업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특징.
- 창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중소기업육성센터(SBDC :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통해 원스톱 창업을 지원
 -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
- * 'Low Doc(간이 심사)'이란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2.1.1 SBIR 프로그램 : 중소기업 연구 조성(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gencies)

- 미국 연방 정부기관 중 일정 규모(년 1억 달러)이상의 외부 연구개발비를 가지는 부처에 대해서 해당 예산의 일정 비율(약 2.5%)을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이용을 의무화해 minority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기술개발 연구에의 참가를 장려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의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상용화를 촉진함.
- SBIR 실시기관은 SBIR로 모집된 R&D과제를 지정해 연간 적어도 한 건의 SBIR모집을 실시해 응모된 SBIR제안을 경쟁적으로 평가해 자격을 채운 중소기업에 SBIR을 줌.
- 미국의 SBIR프로그램은 3단계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의 효과는 고용과 매출액의 10년간의 변화를 이용해 정량적인 평가를 시도하면 SBIR프로그램은 벤처 캐피털의 활발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강한 정(正)

의 효과가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음.

2.1.2 중소기업 투자 회사(SBIC) 프로그램

○ 1958년, 미국 의회는 벤처진흥정책으로서 ‘중소기업 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을 성립시켜, 중소기업 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 SBIC) 프로그램이 설치함.

○ 프로그램의 효과는 SBIC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신규 기술창업이나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요구에 대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음.

3)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

○ SBA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 SBDC)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기술창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트레이닝이나 교육 프로그램, 카운슬링 등을 통해서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나 가이드선의 제공을 실시

○ 뉴욕주의 SBDC 프로그램의 활용 사례 : 198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25만 건 이상의 창업기업이나 기존 중소기업의 지원을 실시해 왔음. 같은 주의 프로그램은 뉴욕 주립 대학에 의해서 운영함.

○ SBDC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는 고용의 증가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입 증가액에 의해서 측정되며, 뉴욕 주 SBDC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동 센터는 창업기업 5만4,471개사, 신규 고용 7 만3천명의 창출에 공헌해 29억 달러의 투자자본과 7,600만 달러의 정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1억 5,700만 달러의 세수입을 달성하였음.

4) 규제 유연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 SBA 시책 홍보에 의하면, 종업원 20인 이하의 기업이 규제 준수를 위해서 부담하는 1인당의 코스트는 대기업과 비교해 45%도 높아짐.

○ 이와 같이 규제에 의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80년 9월에 규제 유연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 RFA)을 제정하였음. 동법은, 연방 부처가 새로운 규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있어 부담을 적게 하는 동등한 효과가 있는 대체안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퍼블릭 코멘트를 요구함.

○ 규제 유연법의 효과 : 2004년에 규제 유연법에 의해 중소기업은 연방 레벨만으로도 171억불의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었음.

2.1.3 주정부의 기술창업 촉진제도

가. 리스크 캐피탈 지원 : 위스콘신 주

-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 주는 낙농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의료기기 제조업에 있어서는 미국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하이테크 산업이 번성.
- 그러나, 미르켄 연구소(Milken Institute)가 2004년 발표한 기술계 벤처기업에 의한 투자 액세스 랭킹에서 위스콘신 주는 전미 50주에서 32위 정도로 저위에 랭킹되어 기술창업투자를 둘러싼 환경에 과제가 제시되고 있었음.
- 2003년 포괄적 경제성장을 완수하기 위한 ‘Grow Wisconsin’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 이러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기폭제가 되는 하이테크 기술기업에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법 255(Wisconsin Act 255)가 제정되어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초기 비즈니스 투자 프로그램 : 위스콘신 주법 255에 의해 창설된 초기 비즈니스 투자 프로그램은, 위스콘신 주내의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 투자가 및 벤처캐피탈에 3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임.
- 기술 상업화를 위한 보조금 및 용자 프로그램 : 위스콘신 주법 255에 의한 벤처지원정책의 제2 요소가 되는 것으로 기술상업화 프로그램.
- 그 외 위스콘신 주 상무성에서는 초기 계획 보조금(Early Planning Grant)이나 기술방법 지원 보조금(Technology Development Fund) 등의 기술창업기업 전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나. 리스크 캐피탈 지원 : 뉴멕시코 주

-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 주는 적극적인 경제개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주 투자협의회(State Investment Council : SIC)와 뉴멕시코 주 경제개발국(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에 의한 벤처 캐피탈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특징이 있음.
- 프라이빗 에쿼티 프로그램(Private Equity Program) : 뉴멕시코 주에 있어서의 기술창업기업 또는 사업 확대·재건을 행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지방 경제 개발법(Local Economic Development Act)의 추진 : 경제 개발국에서는 각 커뮤니티가 지방 경제 개발법(Local Economic Development Act)을 가결해, 경제 개발 조직과 전략적 개발 계획의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인정 커뮤니티 이니셔티브(Certified Community Initiative) : 뉴멕시코주 경

제 개발국은 지역개발 계획 책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에 이른 커뮤니티를 「인정 커뮤니티(Certified Community)」로서 인정하고 있음. 인정된 커뮤니티에는, 경제 개발국으로부터 보조금의 제공을 받거나 프레스 릴리스나 미디어의 공개를 통한 커뮤니티의 선전 활동 등의 특전이 주어짐.

다. 이노베이션(innovation) 지원 이니시아티브 : 인디애나 주

○ 인디애나 21세기 연구기술 기금(Indiana 21st Century Research and Technology Fund) : 선진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에 의한 주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음.

○ 장려 제도 : 인디애나 21세기 연구기술 기금의 장려 제도는 지역에 있어 연구개발에 중사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해 조성됨.

○ SBIR/STTR 매칭 : 21세기 연구기술 기금은 인디애나 주의 중소기업이 SBA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및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에 의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매칭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라. 이노베이션(innovation) 지원 이니시아티브 : 델라웨어 주

○ 미국 북동부 델라웨어 주는 미국에 있어 로드아일랜드 주에 뒤이어 2번째에 면적이 작고, 인구 83만명 정도의 작은 주이지만, 진보적이고 기업에 있어서 유리한 기업법이나, 세련된 재판 제도를 확립해 있는 것이나, 미국의 상장기업의 50%, Fortune 500에 랭킹되는 회사의 60%가 데라웨아 주에서 설립되고 있음.

○ 델라웨어 주는 「뉴 이코노미·이니시아티브(New Economy Initiative)」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첨단기술이나 클린 에너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델라웨어 경쟁력 기금(Delaware Competitiveness Fund)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델라웨어 주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실시해, 고급 고용을 보 관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실시함.

○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 델라웨어 주의 벤처 캐피털에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금 제공을 실시함.

○ 기술계 중소기업 배정 기금(Technology-Based Small Business Seed Funds) : 해고 등으로 퇴출된 기업의 기술자·과학자나 아카데미한 연구자 등이 기술 창업한 기술계 벤처기업에 자금 제공 실시

2.2 영국

2.1.1 배경

○ 영국에 있어서의 기술창업 기능은 기술 집약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 지원 서비스와 실험·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 왔음.

○ 영국의 기술창업은 공적기관인 지역개발공사(잉글랜드는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스코틀랜드는 Enterprise Age-ncy), City Council(지방 자치체), 대학 등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 안에는 City Challenge, City Pride, Single Regeneration Budget 등으로 형성되고 있음.

2.1.2 영국 정부의 지원책

○ 영국 중앙정부의 기술창업과 연관된 보조금은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초기 자금지원의 의미가 강하고, 통상 총비용의 50%를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하드 지원은 Innovative Clusters Fund로 하며, 이 자금은 8지역의 Regional Development Agency와 London Development Agency에 대한 보조금.

○ 소프트 및 그 외 지원은 Biotechnology Incubation and Ment-oring Challenge(BMIC)에서 바이오 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바이오 기술 산업의 특화, 교육 연구기관, NPO, Local Enterprise Council 등 혹은 이러한 연합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사업의 보조 대상 기간은 3년)을 대상으로 설치된 보조금.

○ EU Structural Funds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늦는 지역에 있어서의 각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기술창업자가 Structural Funds를 활용하고 보조 대상은 주로 소프트 사업.

2.3 유럽 연합

2.3.1 EU - 기술혁신 금융과 중소기업

○ 유럽연합의 기업산업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Enterprise and Industry)은 2006년 4번의 컨퍼런스(주제 ; 창업준비 자금지원, 기술이전 자금지원, 지적재산권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관계, 투자 용이성)를 통해 기술혁신 및 이에 따른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준비 자금지원(Seed Finance)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

다.

○ 발표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창업준비 자금지원의 이용 가능성 향상

- 예비창업 단계, 창업준비단계, 초기단계에서 자금지원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에 있어 자금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특히 공공 자금 지원은 창업준비 자금 지원이 부족한 분야와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필요하다.
- 혁신에 기초한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자금 지원 방법은 증권(equity)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성장주 중심의 중소기업(gazelles)만이 활용 가능한 상태다. 보조금 자금 지원 형태는 기능검증(proof of concept) 테스트 분야에 적절하지만, 유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조세혜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 공동투자(co-investment) 계획을 가진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창업준비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나. 자금 지원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활용

-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및 이것이 자금 지원에 있어 얼마나 매력적인 요인인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가치평가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가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개발을 강화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습득해야 한다.

다. 기업가정신 배양

- 정책입안자들은 기업 성장과 역동성에 있어 자금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특히 ‘투자 준비성(Investment Readiness)’의 중요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중소기업들은 ‘투자 준비성’의 잠재적인 혜택을 인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비즈니스 계획, 자금 지원 원천, 투자가의 필요조건, 관리기술, 발표 능력 등에 대한 조언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 준비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준비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3.2 덴마크 : 실리콘 벨리에 최초의 국제혁신센터 설립

○ 덴마크가 처음으로 외국에 국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 2006년 6월 2일 덴마크는 요아힘 왕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에 덴마크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Denmark) 개소식이 열렸다. 덴마크 과학기술혁신부와 외무부가 협력해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설립한 이 덴마크혁신센터는 덴마크의 혁신적 기술과 미국 시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 Per Stig Møller 외무장관은 이 국제혁신센터의 개소를 통해 덴마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의 하나인 미국과 직통 채널을 가지게 됐으며 덴마크의 혁신 및 연구수준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그는 이 혁신센터가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초기단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의 기술기업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덴마크혁신센터는 일차적인 목표그룹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첨단기술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시장 조사 및 테스트, 최신 기술동향 파악, 벤처 캐피탈 알선, 미국 내 창업과 관련된 자문 및 인큐베이터, 사무시설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국 덴마크 기업들이 실리콘벨리의 혁신네트워크와 펀딩 커뮤니티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 양측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네트워크를 연결해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덴마크의 이 실리콘벨리의 혁신센터가 잘 운영돼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경우, 연구개발과 혁신, 자본력 등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도 혁신센터가 추가 설립될 계획이다.

2.3.3 오스트리아 : ISTA 설치법 공포

○ 오스트리아의 연구개발지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과학기술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Bundesgesetz ueber das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Austria)을 2006년 5월 19일 공포.

○ 이에 따라 새로 신설될 오스트리아 과학기술대학원(ISTA)의 법적 근거와 운영의 기본 골격이 명확히 마련됐다. 2006년 3월 말 오스트리아 하원(Nationalrat)과 4월 연방상원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공포된 이 법은 오스트리아 과학기술대학원을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연구중심의 이공계 대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1조).

○ 제 2조는 오스트리아 과학기술대학원의 목적을 (1) 기초연구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2) 박사과정(PhD 프로그램)과 박사후과정(Post Doc 프로그램)의 형태로 수준 높은 대학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 우수한 연구와 박사과정 교육을 결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 또 이 법은 오스트리아 과학기술대학원 운영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8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 학문과 교육의 자유
- 조직, 매니지먼트, 인사 등 운영의 독립성
- 세계 최고의 스탠다드에 입각한 연구
- 전 세계 우수 연구인력의 충원
- 최고 수준의 신진연구원 육성
- 국제화된 연구 및 교육
- 스피노프 창업 지원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한편, 법 공포와 함께 이제 설립 작업이 본격화될 오스트리아 과학기술대학원은 초창기에는 각 5명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10개 정도의 연구팀으로 꾸려나가면서 완성 시점인 10년 후에는 총 25~30개 연구팀에 약 300여 명의 연구원을 확보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3.4 스페인 : 연구 및 개발분야에 대한 투자

○ 스페인은 최근 연구 및 개발 (R &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과학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연구 및 개발 분야의 투자강화를 통해 민간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페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 및 개발분야의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스페인의 교육연구부 장관인 메르세데스 카브레라 (Mercedes Cabrera)는 주장한 바 있다.

○ 이러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스페인 정부는 연구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25% 증대시켜 총 61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GTB2006040997 기사 참조). 스페인이 연구 및 개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6년으로 그 이후 젊은 세대의 연구원, 공학자 및 대학연구인력의 연구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30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결정하였다.

2.3.5 독일

가. 독일 첨단기술기업 창업 지원 확대

○ 독일 연방정부가 <하이테크전략>의 일환으로 첨단기술기업 창업지원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 2006년 9월 25일 베를린의 첨단과학기술 클러스터인 아들러스호프(Adlershof)에서 개최된 독일혁신기술창업센터협회(ADT: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novations-, Technologie- und GrÜnderzentren sowie Wissenschafts- und Technologieparks) 연례총회에 참석한 연방경제기술부(BMWi) 다그마 뵘(Dagmar Woehr) 차관은 연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전략>에 따라 이번 16대 의회기간 동안 총 2.2억 유로를 기술창업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각지의 혁신센터 또는 기술센터가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재 연방정부는 기술기업 창업붐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의 창업분위기 진작, 예비 연구원창업자 지원, 신행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뵘 차관은 이 가운데 기존의 연구원창업지원프로그램 EXIST(Existenzguendungen aus der Wissenschaft)를 올해 5월 부분 조정해 각 혁신/기술센터가 기업창업 인큐베이터로서 대학 및 연구소와 보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또 2005년 독일재건은행(KfW)과 몇몇 대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한 하이테크창업기금(High-Tech-Gründerfonds)을 통해서도 예비창업자들이 초기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하이테크창업기금이 승인한 58텀크창지원건수 중 몇몇 창업기업은 혁신/기술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 지원 강화

○ 독일이 대학과 연구소의 첨단기술기업 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는 2006년 6월 6일 대학과 연구소의 창업 지원에 앞으로 5년 동안 총 3,5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이번 창업지원프로그램 EXIST(Existenzguendungen aus der Wissenschaft)를 통해 연방경제기술부(BMWi)는 대학생과 연구원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발전시키거나 창업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 여성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의 지원프로그램 <여성창업자 파워 이니셔티브>(Initiative Power fuer Gruenderinnen)가 본격화되고 있다.

라. 연구원 창업지원 활성화

○ 헬름홀츠연구협회(HGF)와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 등 독일의 대표적인 공공연구협회가 산하 연구소 연구원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

○ 이 밖에도 독일은 2006년 7월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6년 7월 19일 연방각의는 총 8개 부문에 걸쳐 수십여 개의 세부 대책을 담은 연방경제기술부(BMWi)의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 개요 :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엔진이라고 규정된다. 약 350만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유직종 종사자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의 약 70%, 직업훈련 자리의 약 80%가 이 중소기업에서 제공된다. 특히 서비스부문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3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구동독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아직 이 지역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 최근 독일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은 매우 고무적이다. 독일재건은행(KfW)과 Ifo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경기지수는 2005년 중반부터 뚜렷이 개선돼 올 6월에는 15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호전된 상황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은 다음 8개 부문에서 세부적인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1) 중소기업의 사업여건 개선
- 2) 관료주의적 장애요인의 체계적 철폐
- 3) 창업 촉진
- 4) 혁신역량 강화
- 5) 직업교육 강화 및 인력 수급 원활화
- 6) 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 7)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신생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강화

8)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2.3.6 일본

○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창업촉진’을 법률상으로 명기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천명.

○ 정부가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각종 연수 등을 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일본형 SBIR)

○ 일본은 ‘신사업 창출촉진법’에 근거해 연구개발 예산중에서 신사업의 창출로 연결되는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위탁비등(특정 보조금 등)을 중소기업자 등에 대해서 교부해 사업화까지를 일관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일본형 SBIR)이 있음.

2) Start-Up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처 도전지원 사업)

○ 실용화 개발, 지적 재산 취득, 판로 개척 등을 실시할 때, 자금 면에서의 지원을 받고, 동시에 비즈니스 플랜의 구체화·실용화를 향한 컨설팅 등을 지원.

○ 대상 : 기술 시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 등

<표 27> 일본의 스타트업 지원내용

구분	실용화 연구 개발 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의미	실용화 연구 개발을 실시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에 도착하고 보조를 받을 수가 있음. 또, 비즈니스 플랜의 구체화를 향한 컨설팅을 전체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화 활동(지적 재산 취득, 판로 개척 등)을 실시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음. 또, 비즈니스 플랜의 구체화를 향한 컨설팅을 전체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① 보조금액 - 100만엔~4, 500만엔 ② 보조율 : 3분의 2 이내 ③ 모집기간 - 3월 28일~4월 27일	① 조성액 : 100만엔~500만엔(별도 외국 특허 신청 경비 300만엔을 부가) ② 조성율 : 2분의 1 이내 ③ 모집 기간 - 제1회 5월, 제2회 9월
이용 방법	① 경제산업국에 계획서를 제출 응모 ② 외부심사·평가 위원회를 거쳐 채택 테마를 결정 ③ 경제산업국으로부터 보조금 수급 ④ 경제 산업국에 사업성과 보고	①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계획서를 제출 응모 ② 외부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채택된 테마 결정 ③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로 부터 조성금 수급 ④ 중소기업기반정비구에 사업성과 보고

3) 대학발 벤처 1000

○ 일본의 대학에서 개발된 성과의 대부분이 사장(死藏)되고,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아, 국민생활이나 경제사회에 환원되는 것은 미흡.

○ 대학 등의 발명 등을 기본으로 기업의 창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하려고 하는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실시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룰을 정비함.

○ 또한 ‘신사업창출촉진법’에 근거하는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 제도」를 이용해 기술창업도 상당수(년간 약 20여개)이며, 미국은 2002년 450개의 대학발 벤처기업이 창업됨.

<표 28>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 배출 대학 베스트 10(누적 베이스)

순위	대 학 명	기업수	2003년 설립수
1	와세다 대학	50	3
2	도쿄 대학	46	1
3	오사카 대학	45	4
4	교토 대학	40	7
5	토호쿠대학	35	2
6	케이오 기쥬쿠 대학	31	2
7	홋카이도 대학	26	7
8	큐슈 공업대학	25	4
9	큐슈 대학	23	0
10	토쿄공업대학	22	1

○ 한편, 대학발 벤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대학은 유력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학이 그 수를 늘려오는 등 대학발 벤처에 대한 의식이 지방에도 서서히 확산되어 오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표 29>참조)

○ 대학발 벤처의 사업 분야는 대학발 벤처 799회사를 기준으로, IT하드 분야, IT소프트 분야, 바이오·의료 분야, 환경 분야, 소재·재료 분야, 기계·장치 분야, 그 외 분야의 7종류로 분류됨.

<표 29> 일본의 대학발 벤처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베스트 10(누적 베이스)

순위	도도부현명	기업수	2003년 설립수
1	도쿄도	208	21
2	오사카부	59	11
3	카나가와현	51	5
4	쿄토부	49	5
5	후쿠오카현	47	6
6	홋카이도	36	10
7	아이치현	27	6
8	미야기현	25	2
9	효고현	23	5
10	이바라키현	18	4

2.3.4 중국

1) ‘국가 정보 통신 국제 창업 단지’ 구축

○ 중국 최초의 ‘국가 정보 통신 국제 창업 단지(CIIC)’ 구축 및 중국 최초의 ‘국가 정보 통신 기술 연구원’ 설립 행사가 2007년 6월 22일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첨단기술 산업 단지’ 내에서 개최되었다.

○ 지난 2006년도 말에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국가 신시(信息) 산업부(정보 통신부에 해당)’, ‘국가 상무부’는 산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지난시 ‘첨단기술 산업 단지’ 내에 CIIC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MS, 스커(思科), 히타치, 삼성, LG, 후지쯔, 중썩(中興) 등 200여 개에 달하는 국제 유명 정보 통신업체와 중국 내 유명 정보 통신업체, 연구 개발 기구, 중개 기구들이 현재 CIIC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이번에 설립된 ‘국가 정보 통신 기술 연구원’은 CIIC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5천만 위안 인민폐(약 1,875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연구 개발 거점에 속한다.

2) 중국 세계 일류 첨단기술 산업 개발 단지 구축 추진

○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초우지엔린(曹健林) 부부장(차관)은 2007년 6월 7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시에서 개최된 ‘세계 일류 첨단기술 산업 개발 단지 구축 국제 포럼’에서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국가 첨단기술 산업 개발 단지의 ‘제2차

창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 중국 전역에서 2~3개 세계 일류 수준의 첨단기술 산업 개발 단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 세계 일류 첨단기술 산업 개발 단지로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1) 신흥 산업과 신흥 산업 형태의 발상지로 되어야 하며 첨단기술 산업의 전초 기지로 세계 산업 발전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막강한 자체 성장 및 발전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하며 국제 경쟁력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량의 첨단기술 요소와 전문화된 첨단기술 산업 발전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

4) 새로운 시대의 선행 모델, 제도와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3) 중국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004년 ~ 2010년 중국 국가 과학기술 기초 조건 플랫폼 구축 강요(綱要)'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국가 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왔다. 2년 간의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최근에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어 공식 사용 단계에 들어갔다.

○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 서비스 플랫폼(www.csta.org.cn)' 구축 프로젝트는 '중국 과학기술 정보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실행한 '국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전국의 '과학기술 성과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 성과 정보, 기술 거래 서비스, 공정 중간 테스트, 창업 인큐베이터 관련 정보 자원을 집중하고 과학기술 성과 정보 자원 베이스, 기술 거래 데이터 베이스 및 창업 인큐베이터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더욱 완벽히 구축하였다. 이번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국 내 주요 항업(行業)과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정보 공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4)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인증과 관리 방법' 발표

○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업 부화기(하이테크 창업 서비스 센터)"의 지속속진 발전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기업 부화기"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2일에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인증과 관리 방법" (이하 "방

법”이라고 한다)을 공식 발표했다.

○ 이 “방법”은 현급(縣級) 이상의 도시들이 “하이테크 창업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때 소재지의 성급, 자치구, 직할시의 과학기술 행정부분에 등록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 주관 부문은 국가 하이테크 창업 서비스 센터에 대한 인증과 관리 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III. 주요 국가의 기술창업 종합

○ OECD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창업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기술 창업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 특히, 기술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기술 경영인재의 양성, 기업가정신 함양 및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

○ 미국은 기술개발, 기술금융과 더불어 맞춤형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창업 네트워크(MEP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활용. 기술창업의 약 55%가 중소기업에 의해 형성

○ 일본은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면서 『포커스 21』 및 지역기술개발 등 실용화 위주의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

○ 중국은 첨단 선진기술의 도입 추진, 전통산업의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기술창업 지원계획을 강력하게 시행

- 첨단 과학기술발전 → 『863계획』, 연구성과 상업화지원 → 『횡불계획』, 소규모기업의 현대화 → 『성화계획』

○ OECD, APEC등 국제기구에서도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의 R&D 및 세제지원과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인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의 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